



**아산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11-01**

2011 / 2 / 15

**G20 정상회의 이후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과제**

모종린 / 이상현 / 정서용 / 최원기

목 차

■ G20 성공 요인과 한국 다자외교 리더십 모종린 (연세대학교)	5
■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한국의 G20 외교 추진 방향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11
■ 비확산 외교와 한국의 국제 리더십 이상현 (세종연구소)	24
■ 국제환경협력과 한국의 역할 정서용 (고려대학교)	37
* 아산정책연구원 회의 프로그램	47
* 저자소개	48

『아산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비정기 보고서로서 한국이 당면한 국내외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에 개진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요 약

2010년 11월 11~12일 한국은 G7이 아닌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주도해온 금융안전망 구축(국가부도 위험에 물리지 않도록 국제협력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개발도상국 지원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에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성과 중 하나다. G20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한층 더 높아졌다. 한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어젠다 설정자로서의 역량을 축적하였고, 국제사회의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제 한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마침 G20 정상회의 이후 다자외교 일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기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1~2012년에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중요한 국제회의가 연이어 열리게 된다. 우리나라가 주재하는 정상급회의로서 2011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는 OECD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와 2012년 4월 제2차 핵정상회의를 들 수 있다. 정부의 유치 노력이 성공하면 2012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8)도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다. 이러한 글로벌 외교 일정은 우리나라가 G20 리더십 모멘텀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국제회의에서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글로벌 리더십 강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글로벌 외교를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하에 향후 2년간에 진행될 국제회의를 통합적으로 준비하면 국제회의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준비체계의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리더십 기본계획의 집행을 지원할 범정부 정책조정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G20 리더십을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서 쌓은 네트워크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새로운 정부 조직을 만들어서 한시

적으로 조직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기본 기능을 계승시키고 G20 정상회의 준비 업무의 연속성을 최대화해야 한다. G20 정상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민관협력,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비확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어젠다 세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외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각기 다른 기관이 원자력 외교의 3대 현안, 즉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 ‘저탄소 경제’에 기반한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탄소 경제’는 전지구적 차원의 논의의 역사는 짧지만, 포스트 2012 협상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적으로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와 유사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역할을 빠른 속도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 분야에서의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전략을 고민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리더십에 대한 국내의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의 세계적 연구소와 교육기관의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국민이 글로벌 리더십에서 얻는 실질적 혜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거나 다자간체계에서 동북아 안보를 강화하는 방식 등을 통해 다자외교에 대한 국내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G20 성공 요인과 한국 다자외교 리더십

모 종 린 (연세대학교)*

* 본 보고서의 기획단계에서 도움을 주신 이창용 G20 준비위원회 기획단장과 조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1월 13일 회의에 참여한 권해용 G20 준비위원회 무역국제협력 국장, 이준규 기획재정부장관 자문관, 최현정 청와대 녹색성장환경비서관실 행정관, 김찬우 환경부 국제협력관과의 토론이 보고서 작성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I G20 정상회의와 한국 리더십

■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한층 더 높아졌음.

- 우리나라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도상국 성장과 지원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였음.
- 한국의 조정과 중재 노력으로 서울 정상회의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IMF 거버넌스 개혁 등 회원국들이 참여하게 대립하는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룸.
- 소통과 통합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는 글로벌기업 참여를 제도화한 B20(비즈니스 서밋)을 제안하고 비회원국 협력사업(outreach)을 광범위하게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제시
- 한국의 G20 리더십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어젠다 설정자로서의 역량을 축적하였고, 국제사회의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였음.

■ 한국 G20 리더십의 원천은 리더십 자산, 리더십 전략, 리더십 수행 능력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서울 G20 정상회의는 한국이 신흥선진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위치권력과 신뢰자산 등의 리더십 자산을 보유함을 보여줌.
- 한국 정부가 신뢰자산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가교외교라는 구체적인 리더십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한 것도 리더십 성공 요인이었음.
- G20 참여에서 국격 제고 기회를 포착한 이명박 대통령의 글로벌마인드, 사공일 준비위원장, 이창용 기획단장 등 G20 지도자들의 비전과 글로벌네트워크, 실무진의 추진력과 글로벌능력 등 국내 역량도 한국 리더십에 크게 기여하였음.¹

1 보다 체계적인 논의는 다음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 모종린, 『국제기구 개혁과 미래 : 한국과 G20 리더십』 (서울 : 아산정책연구원, 2010); 손열 · 이승주 · 전재성 · 조홍식, 『신세계질서의 구축과 한국의 G20전략』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2010).

II G20 정상회의 이후의 한국 다자외교 과제

- 이제 한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임.
- G20 정상회의가 대표적인 다자외교 무대임을 고려할 때 다자외교는 우리나라가 G20 성공을 발판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야 하는 분야임.
- G20 정상회의 이후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다수의 다자외교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표 1).
 - 우선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이 아닌 평회원국가로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향후 2년 내에 한국이 주최하는 중요한 고위급 다자회의로 2011년 11월 OECD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와 2012년 제2차 핵정상회의를 들 수 있음.
 - 우리 정부의 유치 노력이 성공하면 2012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8)도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됨.

[표 1] 2010~2011년 주요 고위급 다자회의

글로벌이슈	회 의	일 자	장 소	비 고
국제경제금융	제6차 G20 정상회의	2011.11	프랑스 칸	한국 트로이카 멤버
	제7차 G20 정상회의	2012	멕시코	
개발	제4차 OECD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	2011.11	부 산	한국 주최
기후변화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7)	2011.11~12	남아공 더반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8)	2012	미 정	한국 유치 추진
비확산	제2차 핵정상회의	2012.4	서 울	한국 주최

- 이러한 글로벌 외교 일정은 우리나라가 G20 리더십 모멘텀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다자외교 무대에서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해줄 것임.
 - 동시에 다자외교는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단기적 국익과 성과의 추구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자외교가 우리나라에 많은 리더십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외원조 등 세계공헌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함.²
- 다자외교 리더십 그룹(UN 안전보장이사회, IMF 집행이사회 등) 회원국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구(constituency system) 채택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지역, 중견국, 강소국 등 우리나라가 대표할 수 있는 국가군에서의 지도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³



다자외교 분야 글로벌 리더십 제고 방안

- 새롭게 형성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 많은 리더십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⁴
 - 세계화와 글로벌이슈의 확산, 신흥경제국 부상, 시민사회 참여 확대 등이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다원화와 민주화를 주도
 -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 하에서 다자주의, 중재와 조정, 평화유지 등의 원칙에 충실한 중견국가가 새로운 분야나 강대국의 이해가 대립하는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음.
 - 중견국가로서 인간안보, 환경, 인권, 예방외교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거나 이에 기여한 캐나다가 중견국 리더십의 대표적인 사례
 - 성공적인 중견국 리더십 국가는 공통적으로 국제기구 참여를 통한 다자주의 외교를 중시하고, 다른 중견국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글로벌 이슈 해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임.

2 이흥구, “G20 정상회의 의장국의 명예와 부담,” 『중앙일보』 (2010년 9월 13일)

3 정몽준, “FIFA 선거의 교훈,” 『조선일보』 (2011년 1월 12일) ; 모종린, “G20 외교, 장외국가에 눈을 돌리자,” 『동아일보』 (2009년 4월 28일) ; Jongryn Mo, “East Asia at the Table,”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22, 2009)

4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과 성공 조건에 대표적인 문헌은 다음과 같다 : 김치욱,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의 중견국 (middle power) : 그 개념화와 시사점,” 『국제정치논총』 제49집 1호 (2009), pp.7-36 ; Andrew Cooper, *Niche Diplomacy : Middle Powers after the Cold War* (NY : Palgrave MacMillan, 1997) ; Andrew Cooper, Richard Higgott, and Kim Richard Nossal, *Relocating Middle Powers : Australia and Canada in a Changing World Order* (Vancouver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1993).

■ 2010년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리더십 잠재력을 증명함과 동시에 리더십의 효과적인 발휘를 위해서는 전략선택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었음.

-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제약을 고려할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한 리더십 분야 선정이 리더십 강화의 우선과제임.
- 일반적으로 신흥리더국가는 전통적인 이슈보다는 새로운 이슈나 영역에서 보다 효과적인 리더십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도 2008년에 출범한 G20, 2000년대 후반 등장한 저탄소 경제성장 등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임.

■ 선택과 집중의 원칙은 글로벌 이슈 영역 내에서도 적용되어야 함.

-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위치권력과 신뢰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을 리더십 분야로 선정.
-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에 동시에 어필할 수 있는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를 주도함.

■ 우리나라의 리더십 자산인 개발경험 및 위치권력과 이에 기반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리더십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개발 분야에서 개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개발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은 국제금융 분야에서 1997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 개발 분야에서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한 발전 모델, 비확산 분야에서는 핵의 평화적 활용의 모델, 기후변화에서는 녹색성장의 선발주자로 인식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위치권력과 신뢰자산을 가진 유일한 신흥선진국으로 평가됨.

■ 동시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리더십을 위한 국내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함.

- G20 의장국으로서 축적된 네트워크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특히, G20 정상회의 준비 체계의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조직이 한시적으로

조직된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의 기본 기능을 계승하도록 해서 정상회의 준비업무의 연속성을 최대화해야 함.

- ‘다자외교 리더십 강화 3개년 계획 (가칭)’ 하에 향후 2년간에 진행될 글로벌 다자회의를 통합적으로 준비하여 국제회의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준비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G20 정상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향후 다자외교에서 민관협력,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다자외교 거버넌스 모델을 개척해야 함.
- 장기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기반 강화 방안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의 세계적 연구소와 교육기관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글로벌 외교의 추진을 위해서는 글로벌 리더십의 실질적인 성과와 혜택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고 다자간체계에서 동북아 안보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국내 지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한국의 G20 외교 추진 방향

최 원 기 (외교안보연구원)

I 서론

- 지난 11월 11~12일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shared growth beyond crisis)”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개최된 G20 서울 정상회의는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우리나라가 치른 역대 최대의 국제적 외교행사였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글로벌 가교국가”로서 새롭게 규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서울 G20 정상회의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환율갈등과 무역불균형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도국 개발격차해소 방안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참가국간 합의를 도출하였음. 이로써 세계경제가 최악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 회복기로 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관리체제 형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냈음.
- G20 참여를 통해 얻은 최대의 소득은 우리가 이제는 글로벌 무대에서 강대국 간 이견과 갈등을 중재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섰다는 것임. 우리나라가 “환율전쟁”의 와중에서 G20 정상회의를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특성과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가교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독특한 위치에 기인함. 최단시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여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우리의 발전경험은 신흥국들의 선망의 대상이며, 선진국들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기대와 신뢰를 보내고 있음.
- 이제 앞으로 남은 중요한 과제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가교국가로서 확보한 국제사회의 우리에게 대한 “신뢰자산”을 활용하여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전략을 짜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다자외교 역량과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II G20 서울 정상회의 주요 성과

1 기존의제 및 추가의제에 대한 합의도출로 G20의 협력 모멘텀 강화

- 서울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G20 서울 정상선언문”과 3개 부속서 및 1개 첨부 문서에 합의했음. 정상선언문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금융규제 개혁, 무역, 개발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반부패, 비즈니스 서밋, 아웃리치 의제에 대한 합의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3개 부속서는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G20 반부패 행동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번 서울회의는 G20의 기존의제와 우리나라가 제시한 신규의제에 걸쳐 모두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였음. 먼저 기존의제로서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틀(G20 Framework)”과 관련하여 G20의 정책공조 방안과 개별국가별 정책공약들을 종합한 서울액션플랜을 도출하였음. 아울러, 세계경제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된 환율문제에 대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조방향에 합의함으로써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협력의 최상위포럼으로서 G20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
-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환율문제를 미중간의 양자이슈가 아닌 G20 차원의 글로벌 불균형 해소의 문제로 접근하여 적자국과 흑자국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정치적 원칙을 도출했음. 즉, G20 국가들은 향후 경상수지 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함으로써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임. 시장환율로의 이행합의는 지난 1차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시한 무역장벽 신설금지 합의안에 비견할 만한 조치로, 개별국가의 환율시장 개입을 통한 자국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 시도에 대해 G20 차원의 압력수단(peer pressure)이 될 것으로 보임.

2 IMF 개혁 등 글로벌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본격적으로 참여

- 환율갈등의 완화 및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법 제시와 아울러 이번 서울 정상 회의의 최대성과는 무엇보다도 IMF의 쿼터이전 및 지배구조개혁에 대한 합의라고 할 수 있음. IMF의 지배구조개선은 IMF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그동안 선진국의 반대로 인해 실행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였음.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는 2차 대전 이후 설립될 당시의 선진국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등장한 신흥국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또한 그 기능에 있어서도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많은 신흥국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번 서울 회의에서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악명 높았던 IMF의 대출제도를 개선하고 선진국 위주로 되어 있던 IMF의 지분을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지배구조 개혁도 무난하게 이끌어냈음. IMF 쿼터 6% 이상을 신흥개도국 및 과소대표국으로 이전하고, 현재 IMF 이사회 이사수를 유지하되, 선진 유럽국 이사직 2석을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키로 합의한 것임. 이러한 성과는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금융기구인 IMF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3 개도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리더로서의 이미지 구축

- 이번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우리 정부의 주도로 추진하였던 신규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음. 우선 신흥국의 자본변동성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의제로 설정한 금융안전망 논의는 국내·양자·지역·국제적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 이를 연계한 다층적 글로벌 금융시스템(multi-layered global financial system) 구축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동일한 충격에 노출된 다수국가에 IMF의 탄력대출제도(FCL)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Multi-country FCL)를 도입하고, 지역안전망과 IMF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안전망의 위기에방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이는 우리나라의 주도적 노력으로 이미 지난 8월 합의된 IMF의 탄력대출제도(FCL)의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예방대출제도(PCL)를 도입하기로 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1단계의 후속조치로서 개도국의 금융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된 개발 의제 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원 내용을 담은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도출하고 핵심 분야별 구체적인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을 채택하였음.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개발의제는 개도국의 빈곤감소 및 개발격차해소를 통해 새로운 수요기반 창출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방안임. 특히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무역, 민간투자, 인적자원 등 핵심분야(key pillars)에서의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G20 차원에서 의제화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음. 이로써 신흥개도국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금융안전망과 개발문제에서 성과를 넘으로써 우리나라는 이제 개도국의 리더로서의 국제적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음.

III G20 프로세스의 발전가능성과 과제

1 글로벌 운영그룹으로서 G20의 확대·발전 가능성

- G20는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보교환 및 전문적 정책대안 제시, 자원동원, 새로운 규범과 원칙 설정, 경제금융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기본합의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G20 정상회의의 성격과 역할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선진·개도국의 국제공조, 그리고 위기 이후의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음. 첫째, G20는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의 전 세계적 확산과 국제시장에서의 급격한 수요감소로 야기된 위기극복을 위해 소집되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극복을 위한 주요국 협력체(crisis committee)로서의 성격을 가짐. 둘째, G20의 기능과 역할은 G8과 달리 주요 선진·개도국간의 국제공조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다는 면에서 새로운 선진·신흥국 협력체(North-South cooperation)로서의 성격을 가짐. 셋째, G20는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공조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규제의 개혁을 통해 국제경제의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 이후의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협의체(post-crisis global steering committee)로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G20 프로세스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글로벌 거버넌스 운영그룹에서 소외되었던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등 신흥국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임. 향후에도 G20가 계속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냐의

문제는 선진·신흥간의 권력재분배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협력이 지속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음.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들이 글로벌 경제운영의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stakeholder)로서 협소한 자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공재 창출을 위한 책임분담(burden-sharing)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가 G20 협력 프로세스의 성과창출능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G8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G20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효과적인 협의체로서 지속적으로 기능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금융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안보 분야까지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물론, G20는 G7과 달리, 정치, 경제, 안보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을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G20 차원에서의 협력 메커니즘의 창출여부가 향후 G20의 포괄적인 글로벌협력체로의 발전가능성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2 G20의 발전과제

- G20는 아직도 국제협력체로서 그 제도적 기반이 매우 미약하며, G20가 글로벌 위기 이후에도 국제협력의 중심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전요인을 극복해야 함.

(1) 위기 이후 G20 협력동력 창출

- G20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요인은 세계경제가 위기국면에서 벗어나 정상화된 이후에도 참가국들 사이에 협력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임. 지난 G20 토론토 회의 시 제기된 출구전략 및 은행세의 도입을 둘러싸고 나타난 갈등이나, 서울 G20 회의를 계기로 분출된 “환율전쟁”을 둘러싼 갈등은 위기감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협력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준. G20 협력체제가 향후에도 글로벌 공조의 중심체로서 지속되려면, 위기국면을 벗어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협력의 동력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함.
- 또한, G20는 글로벌 경제위기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조직된 태생적 한계로 인해 긴밀한 국제협력의 토대가 되는 참가국들 사이의 공동의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이 미약하며, 국내정치경제체제 및 정책선호에서 회원국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G8의 경우, 30여 년에 걸친 회원국 간의 협력경험, 세파회의 및 각종 장관급 협의체 등 긴밀한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정치적 지향, 가치의 공유 등, 참여국들 간 긴밀한

협력의 토대가 되는 공동의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공고하게 구축되어 있음. G20가 위기 이후 국면에도 글로벌 공조체제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원국들의 공동의 정체성 또는 공감대(like-mindedness)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2) 비회원국의 참여를 위한 체계적인 외연 확대(outreach) 메커니즘 구축

- 아울러, G20는 EU를 포함하여 주요 19개국만 참가하고 있어, 회원국 구성에서 배타적 성격이 강하고, 유럽 국가들의 과다 참가 및 다수의 개도국 및 아프리카국가들의 미참여, 참가국 구성기준의 모호성 등 대표성의 문제가 있음. 이러한 대표성·정당성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 등 비회원국들과 국제기구의 수장들을 초대하고, 비 G20 국가들의 관심사항인 개발의제 등에 대한 G20 차원의 공조방안을 모색하는 등 외연 확대 활동을 추진해 왔음. 하지만, 이러한 임의적인 외연 확대 전략은 장기적으로 G20의 대표성·정당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단순한 외연 확대를 넘어서 G20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현재와 같은 의장국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기준에 따라 비회원국을 초청하는 것보다는 관련 의제에 대해 지역별·이슈별로 순환(rotation)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비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수장)를 정상회의 개최 시(at the summit)에만 일회적으로 초청하는데 그치지 말고,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between summits)에 이슈 별로 관련 비회원국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G20 의제의 범위와 내용의 확대 여부 (금융·경제를 넘어선 의제로의 확대 여부)

- G20 의제를 금융경제 분야를 넘어서 산적인 글로벌 이슈들을 포함하여 금융경제 분야 이외의 이슈들로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G8의 경우, 1970년대 초 고정환율제가 붕괴되고 중동 산유국의 석유가격 인상으로 야기된 세계경제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이후 이란 회교혁명, 인도차이나 반도의 난민 문제 등이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의제를 정치안보 영역으로 확대해 왔음.
- G20 정상회의도 출범시기부터 G20의 임무(mandate)를 경제위기 극복으로 설정하고, 의제를 금융경제분야의 과제들만을 논의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왔음. 문제는 글로벌 불균형, 금융규제개혁 등 G20의 핵심의제는 구체적 성과를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적, 장기적 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G20를 통한 협력의 모멘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G20가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간 내에 보여줘야 한다는

점임. 즉, 글로벌 위기극복과정에서 G20의 문제해결능력 및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보 되어야만 G20의 모멘텀이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G20가 핵심의제로 삼고 있는 이슈들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G20가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커진다면, G20의 위상은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국제협력의 무게중심이 G20가 아닌 다른 협의체로 경도될 수도 있음. 의제의 무한정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상들이 모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제한적 범위의 글로벌 현안들(예를 들어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등)을 포함하는 의제의 선택적·전략적 확대를 통해 G20의 신뢰도 및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G8 및 다른 협의체와의 관계 설정 (특히, G8과의 역할분담 문제)

-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일본 등은 G20의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한 지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8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유지하고 있고, 상당수의 다른 G8 국가들도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G8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향후의 G20와 G8의 관계는 경쟁, 공존 및 협력의 세 가지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핵심적 과제는 어떻게 양 포럼간의 협력적 분업관계를 형성하는 것인가임.
- G20와 G8의 협력적 분업관계의 바람직한 형태는 G8이 G20 내의 소그룹(caucus)으로서 존재하면서 G20와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임. 향후 G20의 역할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G8은 G7을 중심으로 하여 추가적인 신흥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G7+ α)로의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G8은 정치안보 이슈에 집중하고, G20는 금융경제 이슈를 다루는 것으로 지난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으나, 이러한 역할분담은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란, 북한, 테러리즘, 핵확산 등과 같은 주요 글로벌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가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주요국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큰 무게를 가지기 어려우며, 오랫동안 G7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글로벌 금융경제 이슈에 대한 다년간의 협력 경험과 상대적으로 정책적 전문성과 영향력이 높은 G7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움.

(5) UN 및 국제금융기구(IFIs) 등 기존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적 다자주의 전략은 양자 및 다자차원의 비공식적인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협력을 모색하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G20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UN과 같은 기존의 공식적인 국제기구의 비중감소 및 G20과 같은 비공식적인 협의체와 UN, IMF, World Bank와 같은 공식적인 국제기구와의 관계설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특히, G20 차원에서 논의된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IMF, OECD, WTO,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이 G20의 이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은 다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G20 차원의 합의사항이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통해서 이행되는 경우, G20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IMF의 회원국들이 합의사항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 또한, G20에서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되리라는 보장이 없음. 이러한 경우, G20의 효과성은 심각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G20의 상호평가제도(MAP)의 경우, 참가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기초로 IMF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IMF는 제출된 국가보고서를 취합할 뿐, 제출된 국가별 데이터의 진위여부를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아울러, G20가 결정하고 국제금융기구가 이행하는 관계가 형성될 경우, 국제금융기구의 의사결정체계가 유명 무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IMF나 WB는 G20 출범 이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3G 그룹의 출현에서 잘 보이듯이 UN을 중심으로 한 非 G20 참가국들은 강한 반발을 보인 바 있음.

(6) 사무국 설치 및 운영방식(modalities)의 개선을 포함한 제도화의 문제

- G20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임의적 방식이 아닌 보다 체계적인 회의 체계가 필요함. 올해 G20 의장국인 프랑스는 G20 제도화 차원에서 사무국 설치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하지만 사무국을 어느 나라에 설치할 것 인지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이 문제가 본격 제기될 경우 회원국 사이에 사무국 유치를 위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그 형태와 규모 및 역할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G20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사무국 설치에 집중하기보다는 G20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반적인 운영방식(modalities)의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트로이카 시스템(troika)을 보다 활성화하고 G20 회원국 간의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정책협력채널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Ⅳ 향후 한국의 G20 외교 추진 방향

1 G20 글로벌 거버넌스 외교의 본격 추진 필요성

- G20 참여를 계기로 한국은 그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고급정보와 국제 금융경제 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음. 과거 1997~1998년 외환위기를 겪을 때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G20 서울 회의를 계기로 IMF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줌.
- 우리가 의장국으로 이끌어 낸 환율가이드 라인에 대한 합의는 앞으로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는 구속력이 없는 것임.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글로벌 경제위기 와중에서 급조된 G20라는 비공식적 정상포럼이 안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음. G20가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국제경제협력체로 제도화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함.
- G20는 우리가 참여하는 유일한 글로벌 정상포럼이며, 우리가 G20를 통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G20 무용론 같은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G20의 성과창출 능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즉, G20가 형식적인 정상회의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G20가 향후에도 계속 만들어 내야 함. 이를 위해서는 G20를 중심으로 보다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역량과 전략을 구축해야 함. 특히, 주요국과의 양자현안에만 몰두하던 과거의 개도국형 외교에서 벗어나 G20와 같은 글로벌 현안에 대해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글로벌 다자외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2 G20 글로벌 거버넌스 외교의 목표와 추진 방향

- 2008년 G20 정상회의 출범 이후 지난 서울 정상회의까지 한국은 G20 프로세스를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해 왔음. 2008~2009년의 공동의장국 및 2010년의 의장국으로서 G20 프로세스에서 의제설정(agenda-setter), 정책조율(policy coordinator) 및 협상중재(negotiation broker)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특히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개도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G20 프로세스에서 개도국의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일정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이후 전임 의장국으로 한국의 G20 프로세스에서의 역할과 영향력은 이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G20와 같은 비공식 협력포럼의 성과는 의장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크게 좌우되며, 회의의 준비, 어젠다 설정, 회의 진행 등에 있어서 의장국의 영향력과 역할은 거의 결정적임. 한국은 향후에도 전임의장국으로서 G20 트로이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G20 프로세스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 정책적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한국이 추구해야 할 G20 외교의 목표는 글로벌, 지역적, 국가적 수준의 3개 영역에서 고찰해 볼 수 있음. 첫째, 글로벌 수준에서는 G20의 협력의 모멘텀 지속 및 성과창출능력의 지속적 확보를 통해 G20 협력체제의 공고화를 이루는 것임. G20협력체제는 우리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중요한 채널인 만큼 G20의 공고화는 우리의 국익과 부합될 뿐만 아니라 G20를 통해 우리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헌을 확대하여 우리의 국익제고 및 위상강화의 발판으로 삼아야 함.
- 이를 위해서는 G20 의제를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보다 구체적인 기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발,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의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G20의 제도화 논의와 관련하여 사무국 설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트로이카 시스템의 강화, G20 회원국 간 정책협력 채널의 체계화 및 G20 정책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G20의 운영방식(modalities)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 G20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지역적 수준에서는 G20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그러나, G20 내에서 동아시아 코커스(caucus)와 같은 지역단위의 소그룹을 형성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G20가 새로운 국제협력체로서 가지는 긍정적 성격의 하나는 G20 참가국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선진·개도국 대결구도(traditional bloc politics)를 벗어나 이슈를 중심으로 합종연횡(issue-based shifting coalitions)을 하고 있다는 점임. 이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국가들의 연합전선이 달라진다는 점은 G20를 통해 견고하게 형성된 선진·개도국 간 반목

과 불신을 약화시키고 협력의 가능성을 보다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점이 있음. 지역협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G20 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따로 소그룹을 형성하는 것은 G20 프로세스를 통한 글로벌 차원의 국제공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오히려, G20와 EAS, ASEAN+3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G20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G20를 계기로 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립 및 선진국 진입의 발판 마련을 위한 글로벌 외교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G20 프로세스 참여를 통해 단기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증대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음. 한국에 있어서 G20 프로세스의 전략적 가치는 수출증대나 국가브랜드가치의 상승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물질적인 이익이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국제협력 프로세스라는데 있음. 우리는 이를 통해 글로벌 공공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적 역량과 역할의 확대를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제고할 수 있음.
- G20 정상회의가 일회성 행사가 아님을 감안할 때, 향후 글로벌 어젠다를 설정하고 주도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확보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함. 향후 보다 확대된 글로벌 외교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재양성체제를 구축해야 함. 현재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아카데미와 같은 전문외교인력양성시스템을 보다 확대하고, 경제금융, 환경, 국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를 키워 국제기구 등에 더 많이 진출시켜야 함.
- 또한, G20를 매개로 하여 우리의 외교적 외연을 기후변화, 녹색성장, 개발협력 등 주요 글로벌 어젠다를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리 외교부 및 정부 부처의 다자외교 관련 담당 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우리의 다자외교는 주요 국제기구를 상대로 한 정적인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변화하는 글로벌 어젠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슈중심의 동적인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특히, 정부차원의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과 대응을 담당할 컨트롤타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외교부의 정책기획국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정책기획 및 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이번 서울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제기한 개발의제의 국가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대외원조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발

전경험에 기초한 개발협력전략을 개발하여 개도국에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독자적 기여 확대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함. 특히,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 성장 전략을 개발의제와 연계하여 녹색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함.

비확산 외교와 한국의 국제리더십

이 상 현 (세종연구소)

I 국제 비확산 문제와 한국

■ 21세기 안보환경에서 핵 비확산 및 원자력 이용·개발 관련 국제정세의 일반적 흐름 속에는 몇 가지 상반된 추세가 공존

- 한편에서는 세계적인 고유가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관심 때문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요구가 증대
- 다른 한편에서는 핵 비확산 안보논리가 강조되고 있고, 비확산의 강조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국제적으로도 비확산레짐은 갈수록 강해지는 추세

- 비확산의 강력한 행위자인 미국도 원자력 르네상스라 할 만큼 원자력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핵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비확산 정책을 천명¹
- 9·11 테러 이후 WMD를 이용한 소위 메가 테러리즘(mega-terrorism)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확산 강화 추세는 세계적으로 당위성이 인정되는 목표로 인식됨.

■ 한국 비확산 외교의 목표와 방향성

-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문제는 북핵문제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국제사회 전체의 위협인 동시에 한국이 당면한 최대의 안보위협이기도 함.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을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반도는 핵확산의 주요 지점 중 하나로 비쳐지는 것이 현실임.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드는 모범적인 국가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미래 원전기술 및 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한국 비확산 외교의 목표

1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정책에 관해서는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April 2010, <http://www.defense.gov/npr/docs/2010%20Nuclear%20Posture%20Review%20Report.pdf> (검색일: 2010.4.07) 및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2010 - Fact Sheet*, August 2009, http://www.armscontrolwonk.com/file_download/193/NPR_Background.pdf (검색일: 2010.1.02) 참조.

[표 1] 세계 원자력 이용 현황

국 가	원자력 발전용량 (08)		원자로 수 ('09.10.1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 ('09.10.1 현재)		계획 중인 원자로 ('09.10.1 현재)		제한된 원자로 ('09.10.1 현재)		우라늄 소요량 (08)
	billion kWh	%e	No.	MWe	No.	MWe	No.	MWe	No.	MWe	tonnes U
미 국	809.0	19.7	104	101,119	1	1,180	11	13,800	19	25,000	18,867
프랑스	418.3	76.2	59	63,473	1	1,630	1	1,630	1	1,630	10,569
일 본	240.5	24.9	53	46,236	2	2,285	13	17,915	1	1,300	8,388
러시아	152.1	16.9	31	21,743	9	7,130	7	8,000	37	36,680	3,537
한 국	144.3	35.6	20	17,716	6	6,700	6	8,190	0	0	3,444
독 일	140.9	28.3	17	20,339	0	0	0	0	0	0	3,398
캐나다	88.6	14.8	18	12,652	2	1,500	4	4,400	3	3,800	1,670
우크라이나	84.3	47.4	15	13,168	0	0	2	1,900	20	27,000	1,977
중 국	65.3	2.2	11	8,587	17	17,540	34	36,380	90	79,000	2,010
스웨덴	61.3	42.0	10	9,399	0	0	0	0	0	0	1,395
스페인	56.4	18.3	8	7,448	0	0	0	0	0	0	1,383
영 국	52.5	13.5	19	11,035	0	0	4	6,400	4	6,000	2,059
벨기에	43.4	53.8	7	5,728	0	0	0	0	0	0	1,002
스위스	26.3	39.2	5	3,237	0	0	0	0	3	4,000	531
체 코	25.0	32.5	6	3,686	0	0	0	0	2	3,400	610
핀란드	22.0	29.7	4	2,696	1	1,600	0	0	1	1,000	446
슬로바키아	15.5	56.4	4	1,760	2	840	0	0	1	1,200	251
불가리아	14.7	32.9	2	1,906	0	0	2	1,900	0	0	260
브라질	14.0	3.1	2	1,901	0	0	1	1,245	4	4,000	308
헝가리	14.0	37.2	4	1,826	0	0	0	0	2	2,000	274
인 도	13.2	2.0	17	3,779	6	2,976	23	21,500	15	20,000	961
World Total**	2,601	15.0	436	372,900	52	47,888	135	148,825	295	303,405	65,405

출처: World Nuclear Association, World Nuclear Power Reactors & Uranium Requirements, 1 October 2009 (<http://www.world-nuclear.org/info/reactors.html>); Reactor data: WNA to 1/10/09; IAEA- for nuclear electricity production & percentage of electricity (% e) 5/09; WNA: Global Nuclear Fuel Market (reference scenario) - for U.

**World Total은 다음 국가 포함 : South Africa, Mexico, Lithuania, Romania, Argentina, Slovenia, Netherlands, Armenia, Pakistan, Bangladesh, Belarus, Egypt, Indonesia, Iran, Israel, Italy, Kazakhstan, Korea DPR (North), Poland, Thailand, Turkey, UAE, Vietnam.

■ 과거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이 한국의 비확산 준수(compliance) 신뢰도를 약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첫째, 한국은 국제사회에 비확산 의지를 강력히 입증하지 못했음.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핵개발 시도의 전력을 국제사회가 아직 기억하고 있음. 비록 주한미군 철수 등 당시 한국의 안보상황 악화를 우려한 조치이긴 했지만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시도로 인해 한국은 아직도 잠재적으로 핵개발 가능성이 큰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
- 둘째, 국제 비확산 흐름에 역행하는 여러 사건들이 한국의 비확산 의지에 의혹을 갖게 했음. 2000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소속 과학자들이 국내에서 우라늄 극소량(0.2g) 농축 실험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IAEA에 피소 직전까지 간 사례가 있음.
- 셋째, 한국정부의 정치적 입장으로서,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의 연관성에 따른 의심의 눈초리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발언한 것이나, ‘핵주권’ 주장, 북한의 핵무기도 통일되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이라는 우리 사회 일각의 치기 어린 주장과, 정치권 일각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핵무장 주장도 같은 맥락임.²
- 민주국가인 한국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 일각에서 비확산에 역행하는 발언이 나올 때, 그러한 의견들이 한국정부의 입장이 아니며 한국정부는 확고한 비확산 정책을 견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는 비확산의 취약지대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인 바, 한국은 역설적으로 비확산의 사각지대인 한반도에서 비확산 리더십을 발휘해 한국의 비확산 준수 ‘평판(reputation)’을 높여야 할 상황임.

- 한국의 비확산 리더십 강화는 국익차원의 여러 목표(예를 들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 핵연료 관리의 투명성 제고, 원자력 분야 국제기구에서 리더십 그룹 진입 등)를 성취하는데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비확산은 특정 국가의 국익에만 도움이 되는 어젠다가 아니라 인류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라는 인식 하에 북핵 등 우리의 문제를 글로벌 문제로 승화시킨다는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동북아 및 글로벌 안보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2 전봉근, “한미 원자력협력과 비확산 신뢰성,” 원자력국제협력재단(<http://www.konocof.or.kr>) 2008년 11월 4일 자료 참조.

II 비확산 관련 주요 현안

1 북핵문제와 6자회담

- 6자회담의 경색국면이 오래 이어지면서 관련국들은 6자회담 재개의 모멘텀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
 - 중국과 북한은 6자회담 조기 재개를 통해 천안함 이후 연평도 사태까지 이어진 수세 국면을 탈피하려고 노력
 - 한국과 미국은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도발행위 중지 ▲역내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 ▲9·19 공동성명에 입각한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국제적 의무 준수 등 5개 조치를 요구
- 한국은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6자회담에서 중요한 역할 가능
 - 6자회담은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처음 시작, 6차까지 진행된 회담을 통해 2004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 등 중요한 성과를 거둠. 하지만 2008년 12월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 검증의정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6자회담은 기한 없는 휴회에 들어감.
 - 뒤이어 2009년 4월의 장거리로켓(은하2호/광명성2호) 시험발사, 핵시설 원상복구 및 영변 주재 IAEA 감시요원 추방, 그리고 5월의 제2차 지하핵실험으로 북핵문제는 다시 미궁에 빠져든 상황임.
 - 최근 미·중 정상회담(2011.1.19)에서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게 9·19 공동성명 준수를 촉구한 만큼, 조만간 관련국들 간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한국은 6자회담 관련국들 간 입장의 조율,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일정 부분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2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2012) 개최

■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과

- ‘핵안보(nuclear security)’란 핵물질, 여타 방사성물질 혹은 관련 시설이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적시에 탐지하여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지칭
-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에서 핵테러를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고, 핵물질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제안
- 2010년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선포한 ‘핵무기 없는 세계’ 비전을 실행에 옮기는 첫걸음. 이 회의에는 5대 공인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은 물론이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비공인 핵보유국을 포함해 현재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 등 45개국이 참석
- 거기에 더해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그리고 유럽연합(EU) 대표가 추가로 참석해 한마디로 핵무기를 갖고 있거나 원자력 이용과 관련된 세계 모든 나라와 단체가 참여한 명실상부한 최고의 회의라 할 수 있음.
- 회의 종료와 함께 채택된 코뮌িকে에서 각국 정상들은 우선 핵테러리즘이 국제안보에 가장 도전적인 위협 중의 하나이며, 강력한 핵안보 조치는 테러리스트, 범죄자, 혹은 다른 비승인 행위자들이 핵 물질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히면서 핵군축, 핵비확산과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더해 핵 안보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함께할 것을 선언
- 또한 참가국들은 핵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4년 이내에 모든 취약 핵 물질을 방호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을 환영
- 코뮌িকে 외에도 이번 회의 기간 중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전량 폐기하겠다고 약속함. 칠레는 자국 내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고농축우라늄 18kg을 미국으로 넘기고, 캐나다, 우크라이나, 멕시코 등이 유사한 조치를 발표. 우크라이나는 2012년까지 여러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9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멕시코도 무기급 우라늄을 전량 폐기. 미국과 러시아도 폐막일인 4월 13일 각각 34t씩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없애는 플루토늄 폐기 의정서를 체결³

3 전봉근,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0-12 (외교안보연구원, 2010); 정은숙,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 배경, 성과, 시사점,” 『정세와 정책』 2010년 5월호 (세종연구소, 2010).

- 2012년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10년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한국은 이 문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 2차 정상회의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임. 마치 PSI처럼 하나의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회의가 될 전망이다. 1차 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하고, 비확산 분야 지속가능한 글로벌 거버넌스 기제로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
- 또한 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한 핵문제 진전, 참여국 수 확대 등 1차 정상회의의 범위와 규모, 성과를 넘어서는 회의가 되어야 함.

3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4년 만료, 한·미 양국은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해야 함.

- 지난 50년간 한·미 원자력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강국이자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양국은 핵비확산을 위한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조 (예) 2011년 GICNT(글로벌 핵테러방지구상) 총회,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한국 개최 확정
- 양국 원전산업 확대 발전,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협력 확대가 바람직함.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 R&D 및 차세대 원자로 개발 협력 확대, 양국간 산업·상업협력 확대 추진 필요성 등에 공감
- 2008년 6월 양국 정상이 선언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Joint Vision for Alliance)”에 포함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긴밀한 협력 약속 실천을 위해, 그리고 이미 공고한 관계에 있는 한미 동맹의 경제적 축(pillar)에 추가적인 2개의 버팀목(한미 FTA 및 원자력협정)을 더함으로써 동맹관계 심화를 위해서 협정 개정 필요

- 양국은 2010년 10월 개정 협상을 위한 1차 협의를 이미 시행

- 한·미 양국은 2012년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분기별로 양국이 교대하여 수석대표급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수석대표 협상 사이에 필요 시 부대표급 협상을 추진
- 한·미 양국은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투트랙 방식의 협상에 합의. 한·미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일종인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를 2021년 완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논란 많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분리 처리하기로 합의

-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에는 ‘양국이 공동으로 연구한 파이로프로세싱의 결과에 따라 한국이 독자적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함.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가 성공하면 한국은 평화적인 핵연료 주기 확보가 가능해짐. 미측은 공동연구가 스스로의 필요에도 부합한다고 인식하면서, 한국과의 공동연구를 충실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진지한 자세 표명

■ 향후 협상 목표와 예상 쟁점

- 현재 한국은 원자력 발전량 측면에서 세계 5위국이나, 장차 기술적·상업적 측면에서도 일류 원전국으로 부각될 수 있음.
- 미국은 원자력 이용·개발 분야에서 수많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1970년대 말 원전사고 발생 이후 신규 원전건설을 중단함으로써 전문인력, 건설능력, 부품제조 능력이 후퇴한 데 비해, 한국은 중단없는 전진을 추구함으로써 제반 능력을 구비한 상태가 된 바, 양국간 기술·산업·상업적 협력 심화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
- 한미 원자력협정은 협정 체결 이후 지난 40여 년간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되게, 상호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
- 협상과정 중 예상되는 쟁점 중 하나는 한국이 선호하는 파이로(Pyro) 방식의 비확산성, 경제성, 신뢰성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됨. 파이로 건식기술은 어떠한 경우에도 순수 플루토늄(Pu)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핵확산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큰 처리방식임.
- 파이로 건식처리기술로 회수한 핵연료물질은 방사선을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 없으며, 두꺼운 콘크리트 차폐시설(hot cell) 안에서 원격으로 다뤄야 함. 따라서 IAEA 핵물질 안전조치의 중요수단인 ‘격납감시’의 적용이 용이
- 경수로 원전내 저장된 사용후 연료(2007년말 현재 4,328톤)에 선진 핵주기 공정을 적용해 소듐냉각 고속로(SFR)에 재활용할 경우 2007년 국내 총소비 전력량(403,207 GWh)을 약 90년간 공급 가능한 경제적 효과 기대
- 미국 정부와 전문가 그룹은 파이로(Pyro) 방식이 반복 시행될 경우 플루토늄(Pu) 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완전한 재활용이 아니라 재처리로 보는 경향이 큼.⁴

4 Fred McGoldrick, “New U.S.-ROK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 A Precedent for a New Global Nuclear Architecture,” <http://asiafoundation.org/resources/pdfs/McGoldrickUSROKCUSK091130.pdf> (검색일: 2011.1.20) 참조.

- 국내 전문가들 중 일부도 파이로(Pyro) 처리기술의 안전성, 경제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향으로 국가 원자력 정책이 경도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
- 따라서 당분간 한미 협상과정에서 파이로(Pyro) 방식을 지나치게 주장하기보다는 이미 합의한대로 투트랙 접근을 유지하면서 파이로(Pyro) 방식의 비확산성을 입증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2]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식

구 분	장 점	단 점
직접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저장 후 처분은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후 연료는 자원 → 에너지 안보에 취약 • 대규모 안정된 지하암반의 확보 어려움
습식재처리 (경수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처리 가능 • 입증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 Pu 추출 가능 → 확산 우려로 국제적 동의 어려움 • 2회 이상 재순환 불가능(MOX 경우) • 독성도/발열량 감소 미미 → 처분 이점 미미 → 지속가능성 없음 • 미국의 사전 동의 필요
건식파이로 (고속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rty fuel 개념 만족 → 핵비확산성 만족 • 독성도 및 발열량이 크게 감소 → 처분 효율 증대 → 지속가능성 부합 • 한국의 기술주도권 확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용량 취급의 어려움 • 기술개발 및 실증, 경제성 검증 필요 • 미국의 사전 동의 필요

4 한국의 국제적 리더십 고양을 위한 과제

■ 국제관계에서 리더십 발휘는 보통 두 가지 양태 중 하나를 띤.

- 첫째는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타국의 동의를 강제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흔히 하드 파워(hard power)에 의한 강제력이라 할 수 있음.
- 둘째는 타의 모범이 됨으로써 지지, 협력, 동조 등을 바탕으로 자발적 순응을 도출하는 능력임. 흔히 매력, 소프트파워(soft power)로 불리며, 이는 누가 봐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바탕으로, 공익(public good) 창출에 도움이 되고, 핵비확산레짐 강화에 도움이 되어야 함.
- 한국은 하드파워보다는 소프트파워에 의한 리더십 발휘에 주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비확산과 관련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함.

■ 한국은 관련 비확산 문제의 성실한 관리자로서 한국의 비확산 준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reputation)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함.

- 한국은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비확산 틀 속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모범적 사례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고양해야 함. 핵확산의 주범으로서 북한, 원자력 평화적 이용의 모범사례로서 한국을 대비·차별화함으로써 한국의 비확산 준수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야 함.
-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는 국제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임. 21세기 초국가적 위협의 대표적 요소 중 하나인 핵확산과 핵테러리즘 방지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한다는 것은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에게 의미가 큼.
- 또한 서울을 방문하는 50여 개국 정상들에게 우리 원자력 기술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체험시켜 원전 해외 수주 기반을 늘리는 한편, 핵확산 관련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노력은 과거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핵개발 시도로 인한 원죄론)를 불식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제 핵 비확산 신뢰성 확보

- 국가적으로 핵 비확산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정부, 국회, 정치권, 시민사회)하는 한편, 정부가 비확산 문화의 확산을 계도 및 선도해야 함.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핵주권론’, 북핵에 대응한 ‘핵무장론’ 등 비핵화에 역행하는 주장이 한국의 비확산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국가 비확산 법·제도의 강화(수출통제, ITT 등), 국내 비확산 커뮤니티 강화(전문가 그룹 육성, 기업의 자율통제 체제 도입) 등을 통해 비확산 의식 확산에도 노력해야 함.
- 국제 비확산체제(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수립, IAEA와의 협력 강화)에 적극 호응 및 참여를 통해 한국의 비확산 신뢰도를 제고해야 함.

■ 국내 핵연료주기 활동 및 시설의 투명성 제고

- 선진 안전조치 기술 개발, 핵연료주기 시설의 국제개방, 공동연구 등으로 투명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일관성 있는 국가 장기정책 및 프로그램 필요. 한국 핵연료주기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타당성(기술성, 경제성, 핵비확산성, 친환경성 등)에 대해 미국 포함 공신력 있는 기관·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비확산 의지를 입증해야 함.

■ 한국의 원자력 외교 강화

- 미국의 원자력 정책 결정체계를 예를 들면, 정부 내에서는 에너지부(DOE), 국무부 내 국제안보 및 비확산국(Bureau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이 비확산 문제와 원자력 문제에 관여
- 미 의회에서는 상원외교위원회, 하원외무위원회, 의회 본회의, 상원 에너지·천연자원 위원회, 상원 에너지 소위, 상원 세출위, 하원 에너지 상무위, 하원 에너지 소위 등이 관련⁵
- 이처럼 다양한 기관들로 이뤄진 정책수립 체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이들 기관에 대한 대응창구(counterpart)를 어떻게 설정하고 대응할 것인지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확립이 시급히 필요⁶
-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을 중심으로 군축비확산과, 국방부의 비확산 담당부서 및 대미정책 부서,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의 원자력 담당부서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설정하고, 일사불란한 추진체계를 갖춰야 함.
- 효율적인 대미 원자력 외교 수행을 위해 정부 내,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설정하고 정보 공유와 전략 도출 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원자력 외교 관련 인력과 자원의 시급한 증원이 필요함.⁷
-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원자력 외교라고 하면 대개는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북핵 외교만을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의 원자력 외교는 북핵문제보다 훨씬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정부 내 추진체계에 더하여 가장 중요한 정치 환경적 요인의 하나는 최고 정책 결정자의 의지와 결단임. 특히 대통령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 얼마나 열의를 가지

5 정옥임, “미국의 21세기 원자력 정책: 함의와 대안,” 『전략연구』 제38호 (2006), pp. 106~107.

6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원자력 외교체계가 한국에 비해 비교적 잘 작동한 것으로 평가됨. 전진호, “대미원자력 국제협력 추진 방안 연구: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 가동에 관한 미일 원자력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원자력국제협력 정책연구 시리즈 No.3(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제협력재단, 2008) 참조.

7 이상현, “한국의 핵 비확산 정책 : 한미 원자력협력을 중심으로,” 『세종정책연구』 제6권 1호(2010), pp. 102~109.

고 추진하는지가 향후 협상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핵 비확산 및 원자력 이용·개발의 국제적 추세를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수립 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 금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오바마-후진타오 정상회담에서 는 북한의 추가도발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음.

-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서 ‘미·중은 북한의 우리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우려 (concern)를 표시했다’는 문구를 넣은 것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됨. 공동성명은 ‘양측 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국제의무에 모순되는(inconsistent with) 모든 행동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국제의무’는 곧 북한의 모든 핵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 리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 1874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미는 이에 따라 북한 UEP를 안보리로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함.
- 미국은 북한의 UEP 사안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 안보리 제소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중국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한다며 북한의 UEP 위협에 대한 판단 유보 입장을 보여왔음. 금년 1월 14일 중국 외교부의 추이토펬카이 부부장은 “중국은 북한의 우리농 축시설을 본 적이 없다”며 “아직은 분명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해, 북한이 2010 년 11월 잭 프리처드 한국경제연구소장과 핵 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씨를 초청해 수 천 개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우리농 농축시설을 공개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음.⁸
- 비록 북한의 우리농농축에 대해 ‘안보리에서 논의한다’, 혹은 ‘위반(violate)’ 등의 표 현은 포함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는 중국의 UEP에 관한 첫 공식 성명이고,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명확하게 표현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주는 충격이 클 것으로 평 가됨.
- 정상회담의 또 다른 성과는 중국에 핵안보센터(Center of Excellence on Nuclear Security)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데 합의한 것임. 이는 미국과 중국이 핵확산과 핵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비확산 국제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핵무기 없는 세 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조를 다짐한 것으로 평가됨. 이를 위해 양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등에 대한 지지 입장도 재확인하 는 성과를 거뒀음. 핵안보센터는 중국이 자본을 대고 미국은 중국에 핵재해와 테러리

8 북한의 최근 우리농농축 활동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윤덕민, “북한의 우리농농축 프로그램과 대응방향,” 『주요국제 문제분석』 No. 2010-42 (외교안보연구원, 2011. 1. 12) 참조.

즘에 대처하는 공동 훈련, 핵 탐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임.⁹

■ 향후 비확산 분야의 어젠다 세팅을 한국에 유리하게 설정하기 위한 전략 도출에 노력해야 함.

- 핵안보 정상회의의 경우 의장국으로서 일정 부분 어젠다 제시 가능·조정 역할, 설득 및 통합 역량 발휘 여지 있음.
- 북핵문제 해결, 비확산, 한국의 원자력 평화이용권 확대 등 세 가지 목표를 어떻게 동시병렬적으로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범정부, 학계, 전문가 그룹을 망라하는 협업체제 구축 필요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핵무기없는 세계를 만드는 모범적인 국가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미래 원전기술 및 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 천명

⁹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U.S.-China Joint Statement,”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1/01/19/us-china-joint-statement> (검색일 2011. 1. 20).

국제환경협력과 한국의 역할

정 서 용 (고려대학교)

I 글로벌 환경협력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

1 글로벌 환경협력에서의 한국의 활동

■ 과거 글로벌 환경협력에의 수동적인 참여를 해옴.

- 글로벌 환경협력은 그 대상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
-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다양한 글로벌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뤄져 옴.
- 약 20년이 지난 지금, 기후변화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환경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생물다양성,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관련 이슈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해양 환경 문제의 경우 글로벌 환경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의 특수성 상 주로 지역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음.

■ 우리의 경우 그동안 글로벌 환경 어젠다와 관련하여 특별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였음. 이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음.

- 글로벌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였음. 예컨대, 냉전 이후 환경안보와 같은 새로운 개념 대두와 함께 주요 국가들은 이를 글로벌 질서 재편의 새로운 외교전략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함. 이를 통해 NATO, OSCE와 같은 국제안보 협력체는 물론 독일, 미국 등과 같은 주요 국가들이 그들이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어젠다화를 꾀함.
-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과학적·기술적 기반이 강하지 못하였음. 이는 글로벌 환경문제 초기 대응 단계에서 다루는 과학적 불확실성 제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이후 레짐 형성 과정에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짐.
- 그동안 우리는 매우 심각한 글로벌 환경문제에 노출된 적이 없었음.
-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누리기 위한 기반이 취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도국 지위를 누리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대개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입장이 대립되는 글로벌 환경문제 논의 과정에서 어느 주요 그룹에도 직접

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게 됨.

- 이에 따라서 우리의 글로벌 환경협력에 대한 대응은 지구사회에서 논의되는 이슈들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정도에 그쳐 왔으며, 글로벌 표준 및 기준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전략의 주안점을 두어 옴.
- 그러나 최근 들어 글로벌 환경협력에서 기여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함.
 - 경제 발전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이 국내적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가져옴에 따라서 환경문제가 국내 주요 어젠다로 부상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기 시작함.
 - 이에 따라서 환경 관련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이는 이들 분야의 수준이 상당 수준에 이르게 되는 계기가 됨.
 -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한 대응을 오히려 우리사회의 성장 동력화 기회로 삼기 위해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해 옴.

2 향후 국제환경협력에의 적극적인 기여 가능성

- 어젠다 설정에 기여 가능성
 - 현재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제시된 녹색성장 정책의 경우 유엔 기후변화 협약 체제 내는 물론 여타 국제기구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어젠다화에 기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OECD, UNEP 등에서는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등에서도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 및 시행하고 있음.
 - 지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녹색성장 어젠다가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으나, 기존 의제의 하나로써 다뤄졌으며, 비즈니스 서밋을 통하여서 녹색성장 관련 이슈들이 다뤄지고, 향후 프랑스 정상회의에서도 계속해서 다뤄지기로 하는 등의 발전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향후 G20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음.
 - 특히 지난해 6월 설치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기후변화·녹색성장 관련 국제적

전문가 및 선도 국가와의 파트너십 하에서 녹색성장 정책의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의 가능성

- 기후변화 문제의 경우 우리는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과 함께 개도국 그룹인 비 부속서 I 그룹에 속하지만, OECD 국가로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도 상위를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선진국 그룹인 부속서 I 그룹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음.
- 우리는 현재 개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방법과 동일하거나 혹은 이와 같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심각한 대립으로 인한 포스트 2012 기후변화 레짐 형성을 위한 협상 지연을 타개할 수 있는 역할 수행이 가능할 수도 있음.

■ 글로벌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주도적 참여

-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출신이라는 점에서 유엔 내의 글로벌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임.
- 이 경우 주도국으로서 자원 등을 단순 참여국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을 것임.

II 동북아환경협력을 통한 역내 소프트 리더십 강화

1 동북아환경협력 현황

- 동북아 지역은 소수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지만 국가 간 협력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지역임.
 - 동북아 지역은 일반적으로 지구상에서 다자협력체의 구성이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

-
- 중국과 일본의 역내 리더십 확보를 위한 경쟁,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문제 등은 국가 간의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한편 동북아 지역은 급속한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지역 환경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
 - 황사, 산성비, 해양오염, 물 부족 문제 등이 역내 가장 대표적인 환경 문제임.
 - 기후변화 문제의 경우는 지역 환경문제로서의 성격보다는 글로벌 환경문제로서의 성격이 크지만, 지역차원에서도 협력이 가능한 문제임.
- 동북아 지역은 일반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체를 형성하기 위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음.
 -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리더십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상 과학적 역량, 재정적 능력 및 외교적 영향력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함.
 - 중국의 경우 과학적 역량 및 재정적 능력 면에서 역내 환경협력을 주도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임.
 - 일본의 경우 과거사 문제로 인하여 역내 지역환경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외교적 영향력 면에서 한계가 있음.
 - 우리의 경우에는 역내 환경협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으나 중국 및 일본을 리드할 수 있기에는 아직 모든 면에서 영향력이 충분하지 않음.
- 국제기구의 경우 UNEP, UNDP, UNESCAP, ADB 등이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소지역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위해 충분한 전문성, 자원, 인력 등을 투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UNEP의 경우 해양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인 지역해프로그램(Regional Seas Program)의 일환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을 동북아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투여 예산 규모 및 사무국 인력 면에서 한계가 있음.
 - UNDP의 경우 황해 지역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시 글로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광역생태계사업(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의 일환으로 황해

광역생태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엔 체제 내에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로부터 비교적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상설 기구화 이전 단계인 사업 단계에 머물고 있음.

- UNESCAP의 경우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의 임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편, 2010년에는 동북아 지역을 담당하는 소지역 사무소를 인천시에 개소하여 동북아 지역의 환경 문제를 비롯한 사회개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역시 자원 및 인력 면에서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임.

2 동북아환경협력에서의 한국의 참여

- 한국은 그동안 지역 협력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동북아환경협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음.

- 글로벌 환경협력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는 동북아 역내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협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통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오고 있음.
- UNEP의 북서태평양실천계획 및 UNDP의 황해광역생태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사무국을 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황해광역생태계사업의 경우 사무국을 우리나라에 단독으로 유치하고 있음. UNESCAP의 경우에도 동북아 소지역 사무소를 역시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음.
- 재정 기여의 측면에서도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타국에 비하여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사무국 유지를 함에 있어서도 추가로 재정 지원 및 인력 보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국가만의 협력은 한·중·일 삼국의 환경부 차원의 협력체인 삼국환경장관회의(TEMM) 경우도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TEMM의 경우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참여 확보 및 참여국 확대 문제, 지속적인 컨텐츠의 참여국 자체적 개발 문제, 참여국 간 합의사항 국내에서 실효적 이행 문제 등이 향후에 해결될 필요가 있음.

■ 다자협력과 함께 양자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일본 및 중국과는 각각 어업협정 및 환경협력 협정을 통하여서 양자 차원에서 생물자원 및 환경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여 옴.

■ 다만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은 역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 제시, 일본과 중국 간 조정자 역할, 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도 등의 면에서는 아직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상태임.

III 우리의 국제환경협력에서의 역할 제고를 위한 과제

1 국제환경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

■ 국제환경협력은 환경문제의 해결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스피로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문제는 글로벌 어젠다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반면, 그 논의 역사가 짧음으로 인하여서 글로벌 질서 재편 과정에서 국제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리더십 강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있어 직접적 규제보다는 환경보호와 함께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접근방법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 환경협력은 지구 경제 질서에 새로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음.
- 국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권국가 간에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자외교의 중요성이 매우 큼.
-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 시 국가 간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안전보장의 측면에서의 의미도 큼.

■ 그러나, 우리의 국제환경 대응 전략은 다분히 기술적(technical)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경향이 큼.

- 국가 차원에서 국제 환경문제 중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큰 문제 여부에 대한 평가 및 이에 기반한 대응 전략 개발이 없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음.

- 즉, 글로벌 및 동북아 환경문제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활용 가치가 있는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글로벌 환경협력에서 리더십 행사 가능 분야에 집중 필요

■ 글로벌 환경문제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향후 우리의 글로벌 환경문제 대응에 있어서 리더십 강화가 가능한 분야로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 포스트 2012 협상을 계기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저탄소 경제에 기반한 대응 방안이 우리나라 녹색성장 전략과 유사하고, 이에 대한 지구사회 차원의 논의 역사가 매우 짧다는 점, 그리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단기간에 우리의 역할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현 정부 뿐만이 아니라 향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 녹색기술, 녹색산업 등과 같이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이 있는 문제의 경우 글로벌 시장 창출을 통한 우리의 영향력 및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대 개도국 대응의 경우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등 우리의 ODA 정책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개발·유지할 필요가 있음.

■ 여타의 글로벌 환경문제의 경우 국제협상 추이를 관망하면서 향후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생물다양성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환경문제의 경우 이와 관련된 과학적 역량, 기술개발 및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하에 여타 다른 국제 환경문제와의 중요성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동북아 환경문제의 경우, 지난 15여년의 기간 동안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하여 다양한 협력체가 발전하고, 사무국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역내 우리의 리더십 강화가 가능한 분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과학적 역량 강화, 지역 환경협력 사업에 투여 예산의 증액 및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3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적극적 활용

- 2010년 6월 공식 출범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향후 우리의 글로벌 국제 환경협력에서 리더십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적극 활용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참여 (가능) 국가 및 외국 전문가들의 글로벌 환경문제에서의 높은 비중을 고려하여 이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함.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우리의 연구소라기보다 그 독립성이 보장되는 국제기구의 본부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타당함. 인도적 문제에 관하여 스위스가 국제적십자사를 스위스에 유치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므로 이들의 운영 방식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조약에 바탕을 두고, 유엔 체제 하의 국제기구화를 추진함으로써 연구소의 보편성 및 정당성 확보와 함께 그 영향력 제고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이는 또한 글로벌 주요 어젠다에 대한 유엔의 대응 노력의 맥락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공헌을 통하여 또 다른 측면에서 글로벌 리더십 강화가 가능할 것임.
 - 아울러 현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주요 개도국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함께 성장이 가능한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재 난관이 부딪히고 있는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이 가능할 것임.

4 역내 리더십 강화 차원에서 동북아환경협력의 적극 활용을 위한 과제

- 동북아환경협력의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성과를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의 리더십 강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용을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환경협력은 환경문제의 해결이라는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동북아 지역 통합 과정에서 우리의 리더십 강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의 개발이 필요함.
 - 또한 동북아환경협력은 향후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폐쇄적인 북한을 평화적인 지역 다자 협력체제에의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북한의 개방과 평화 공존 그리고 역내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다만 우리 독자적으로는 역내 국가를 충분히 리드할 수 없다는 면에서 국제기구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우리를 비롯하여 역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5 국제환경협력에서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의 강화 및 민관 파트너십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강화

-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성장 동력의 발굴 차원과 함께 우리의 글로벌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리더십 강화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대응, 우리의 성장 동력 개발 측면에서의 대응 및 우리의 대외 전략 개발 측면에서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 간 및 부처 내 조직의 개편이 필요함.
 - 특히 외교통상부의 국제환경협력 담당 조직이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음.
- 국제 환경문제의 종합적인 성격은 정부 부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부문의 공동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 및 시행에서 관련 국내외 민간 전문가, 민간 연구기관 및 주요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G20 정상회의 이후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과제

일시 : 2011년 1월 13일 (목), 오후 3시 ~ 6시 30분

장소 : 아산정책연구원 4층 대회의실

3:00 ~ 3:10	등 록	
3:10 ~ 4:10	제 1 세션	G20 리더십 유지 방안
	사 회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
	발 제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토 론	이준규 기획재정부장관 자문관 권해용 G20 준비위원회 무역국제협력국장
4:10 ~ 5:10	제 2 세션	비확산 외교와 한국의 리더십
	사 회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발 제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토 론	이경렬 외교통상부 한미원자력협정 TF 팀장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10 ~ 5:30	휴 식	
5:30 ~ 6:30	제 3 세션	국제환경협력과 한국의 역할
	사 회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발 제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토 론	김찬우 환경부 국제협력관 최현정 대통령비서실 녹색성장환경비서관실 국장

저자소개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Cornell University에서 경제학 학사학위를,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Stanford University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협상이론, 한국 발전의 정치경제학, 동아시아 국제관계, 글로벌 거버넌스 등이 있다. 저서로는 “Does the United States Need a New East Asian Anchor? : The Case for United States-Japan-Korea Trilateralism” (*Asia Policy*, 2010), 『시장경제와 외국인투자』 (나남, 2010), 『영어상용화와 국가경쟁력 : 영어공용화 논쟁을 넘어서』 (나남, 2010) 등이 있다. 세계화연구센터 홈페이지(www.rig.or.kr)를 통해 국내외 세계화 이슈에 대한 에세이와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국제관계연구소와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아시아연구원(EAI), 국가안보패널(NSP) 연구위원, 매일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통일부, 육군,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논저로는 『세계화 시대 한국의 국가안보: 주요 내용과 특징』 (공저, 2010), “The 2010 NPR and North Korean Nuclear Issue”(2010), “이명박 정부 중반기 한미 안보협력 과제와 전망”(2010), “한국의 핵 비확산정책: 한미 원자력협력을 중심으로”(2010) 등이 있다.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London School of Economics (LSE) 및 Stanford Law School에서 국제관계학 및 법학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기후변화를 비롯하여 국제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과 정책분야 전문가로서 유엔 바젤협약 이행준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UNDP, UNIDO, 녹색성장위원회, G20 준비위원회, 외교통상부 등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관심연구분야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지역경제협력, 비전통안보, FTA, 경제개혁과 경제발전, 금융세계화, 정치제도와 경제정책 등이며, 최근에는 G20과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동아시아지역협력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2009년 12월 “G-20 금융정상회의 대응 한국의 외교적 과제”로 외교통상부 장관상 (우수보고서 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주요저서로는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공저, 통일연구원, 2007), 『녹색성장의 길』 (공저, 중앙북스, 2009), 『G20 코리아, 더 큰 세계로 : G20 정상회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공저, 2009)이 있다.